

# 자유민주주의의 공간: 1960년대 전반기 <사상계>를 중심으로\*

마 상 윤 | 가톨릭대학교

본 논문은 1960년대의 <사상계>를 중심으로 당시 현실정치의 맥락하에서 지식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관념하였는지를 살핀다. 냉전과 남북대결이라는 구조 아래에서도 <사상계>를 중심으로 일단의 지식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꿈꾸고 설계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인식하면서, 따라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진로이자 중요한 정체성의 요소가 되어야 했고, 또한 이를 통해서만 민족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두 개념인 자유와 민주에 대한 <사상계>의 인식은 그리 예리하지 못해서 종종 둘을 혼용했다. 한편, <사상계>의 민주주의자들은 민족 개념을 중심으로 박정희와 친화하였으나 한일회담을 기화로 끝내 그와 불화하게 되었다. 이후 <사상계>가 민주주의는 물론 민족주의의 측면에서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되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은 도덕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주제어:** 1960년대, 4·19, 5·16, 민족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박정희, 사상계, 장준하, 한일회담

## I. 들어가며

자유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현대 한국정치의 지배적 정치규범이다. 해방 직후 제기되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구상(김정인 2016)은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냉전이 격화되며 한국정치에서 유효성을 크게 상실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의 유일한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념은 “지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3683).

속적으로 도전받아 왔고, 무시되었으며, 비록 가장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특히 정권담당자들에게 의해 경멸을 받아왔다”(박상섭 2012, 255). 또는 박정희가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그러했듯이 대체가 시도되기도 했다(강정인 2014). 적어도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전까지 자유민주주의는 이상으로서만 남아있었을 뿐, 현실의 정치는 이상에 반하여 움직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으로서의 존속과 현실적 실패가 공존했던 현상은 국제냉전을 배경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냉전의 국제정치에 편입되었으며, 적어도 명분의 차원에서 미국의 정치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당시 한국정치에서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자유민주주의가 서양으로부터 외래 이념으로 수용되었으나 한국사회에는 정작 그 이념의 실질적 작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통과 인적·물적 기반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반공주의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는 자조적 평가도 나온다.

본 논문은 <사상계>를 중심으로 1960년대 현실정치의 맥락하에서 지식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관념했는지를 살핀다. 1960년대의 한국정치가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후 일 년 남짓을 제외하면 줄곧 권위주의 정부 아래 놓여있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며,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의 자유민주주의 논의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60년대 한국정치 연구는 주로 산업화와 이를 추진한 박정희에 초점을 맞추었다(예를 들어 강정인 2014; 류상영 2002). 그러나 냉전의 국제정치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구조 아래에서도 일단의 지식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꿈꾸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바로 <사상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정치적 논의를 전개했던 지식인 그룹이다. <사상계>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장준하에 의해 창간되어 1970년 폐간될 때까지 한국 지성계를 대표하는 고급교양지였다. <사상계>는 그 목적을 “자유 평등 평화 번영의 민주사회건설”에 두고 있었던바(사상계 55/08), 자유민주주의는 <사상계>의 이념적 좌표를 표상하는 대표 개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상계>를 주도했던 지식인들은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혁신계’라고 불린 그룹과도 차별성을 유지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반공주의 입장을 견지했고, 동시에 후진성의 탈피를 위한 근대화 과제에도 강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사상계〉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무엇을 꿈꿨는가? 이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이들의 한계는 무엇이었는가? 또 이들의 실패 경험은 이후의 한국정치에 무엇을 남겼는가? 이러한 질문은 비록 한국정치의 역사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묻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시기적으로 이 논문은 1960년대 전반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이유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그리고 〈사상계〉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첫째, 한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명분이 현실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내재화된 것은 1960년에 이르러서였다. 4·19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가시화한 것이었다. 아울러 1960년대 전반기에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외양이 유지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사상계〉 같은 잡지를 중심으로 지식인들의 활동 공간도 유지되었다. 둘째, 1960년대 전반기는 정치적 오피니언을 선도하는 〈사상계〉의 역할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이다. 1953년 창간에서 1958년까지 〈사상계〉는 “계몽지·교양지 성격”이 강했다. 그러다가 1959년부터 1962년 사이에는 “정치평론지적 성격”이 강화되었고, 이어 1963년에서 1965년에는 “정치투쟁지적 성격”이 두드러졌다. 이때에 〈사상계〉는 군정연장반대와 한일회담반대에 앞장서며 박정희 정권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나 1966년 이후 〈사상계〉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유공간’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무력화”되어 갔다. 장준하의 역할도 언론인에서 ‘야당정치인, 반체제 민주투사, 통일운동지도자’로 바뀌어 갔는데, 이로써 〈사상계〉는 “중심지도력이 해체”되고 “시대적 임무와 역할이 끝나게” 되었다(노종호 1995, 219-220).

아래에서는 먼저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서의 〈사상계〉 그룹의 형성과 지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사상계〉가 1960년대 전반기 한국정치의 변동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대응했는지를 지면을 통해 전개된 자유민주주의 논의에 집중하면서 시기 순으로 검토할 것이다. 〈사상계〉 지식인 그룹은 4·19에 크게 감격했으나 그 감격만큼이나 4·19 직후의 사회적 혼란상에 실망했다. 이러한 실망은 〈사상계〉가 5·16을 환영한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이들은 박정희가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에 부분적으로나마 동의했다. 하지만 민정이양과 군정연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사상계〉는 점차 ‘혁명군인들’에게 실망했고,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반대에 나서면서 박정희와 결정적으로 반목하게 된다. 이후 한국정치에는 독재와 민주주의 이분법적 구도가 보다 선명하게 남게 되었다.

## II. 〈사상계〉와 자유민주주의

〈사상계〉는 한국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던 1953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장준하에 의해 창간되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그가 교양잡지를 만들었던 구체적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의 학문과 교양잡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는 있다. 장준하는 목사가 되기를 꿈꾸며 1941년 독일하여 일본신학교에서 수학했으나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1944년 일본군에 학병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곧 탈영하여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가 광복군이 되었다. 그는 광복군으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등사판 선전 잡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었다. 해방 후 귀국한 장준하는 김구의 비서로 있다가 이범석이 조직한 조선민족청년단의 중앙훈련소 교무처장으로 잠시 일했다. 하지만 해방직후의 혼란한 정치는 그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임정 세력은 무력했고, 족청은 권력과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다른 정치단체와 별 다를 바 없다고 느꼈다. 장준하는 학업을 계속할 생각으로 정가를 떠났다(김삼웅 2009, 294-303).

장준하는 미국 유학을 모색했지만 가족부양 및 생계문제로 포기하고 대신 한국신학대학에 편입하여 1949년 6월 졸업한다. 이후 문교부 국민정신계몽 담당관이 되어 일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지면서 따라 내려갔다. 이 때 문교부에 “국민정신을 바로잡고 민족이 가져야 할 사상적 체계확립의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국민사상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새로 설치되고 그 기관지 형식으로 〈사상〉이라는 잡지가 간행되었는데, 그 편집을 장준하가 맡았다. 〈사상〉은 1952년 9월 창간호가 발간되고 이후 12월까지 통권 4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판매부진이 원인이었다. 〈사상〉의 폐간과 함께 장준하도 국민사상연구원을 나왔다. 그리고 〈사상〉 제5호를 위해 이미 모아두었던 원고를 가지고 홀로 새 잡지 창간을 추진한다(김삼웅 2009, 312-316).

새 잡지는 〈사상계〉라는 이름으로 1953년 3월 10일 발간되었다. 창간호의 편집후기에서 장준하는 “〈사상〉 속간을 위하여 편집하였던 것을 〈사상계〉란 이름으로 내어 놓게 된다. 동서고금의 사상을 밝히고 바른 세계관 인생관을 수립하여 보려는 기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발간 의도를 밝혔다. 아울러 인간문제를 특집으로 창간호를 꾸민 데 대하여 “인간 문제는 철학의 구극과제임에 틀림없다. 고래로 이 문제

의 해명을 위하여 전생을 바친 철학자 종교가들이 허다하거니와, 이는 비단 철학자 종교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다 같이 지닌 영원한 과제이며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바른 견해는 모든 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이며, 바른 표준을 가진 사회 민족 국가에서만 인간의 불안과 의구는 제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사상계 53/04). 이렇게 <사상계>의 출발은 뚜렷한 정치적 의식보다는 인문학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겨레의 생각을 모아 학적 체계를 세우고, 이에 설 수 있는 사상적 건축을 완성하여 보려고 애쓰는 본지의 노력”이라는 장준하 자신의 설명도 이를 뒷받침한다(사상계 53/11).

그렇다고 <사상계>의 시야가 당시 한국이 처해있던 혼란상에서 전적으로 비껴나 있던 것은 아니다. 장준하는 제2호부터 매호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신기로 했음을 밝히면서 그 이유를 “남의 생각”인 민주주의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기의 중심이나 목표”가 없거나 “편견을 가지고 … 무시하는 일은 모두가 극히 어리석은 일이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겨레의 역사와 생활을 더듬어 민족고유의 사상을 찾고, 전 인류가 지향하는바 민주주의 원리를 석명하며 세계의 모든 사상 사조를 밝혀 민족생활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사상계 53/05). 장준하는 전란과 관련해서도 <사상계>의 목표가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무력전의 승리”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평화”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사상계 53/06). 또한 휴전 즈음해서는 “황폐화한 국가재건에 필요한 양식이 되고 공기”가 되겠다는 <사상계>의 실천적 사명을 제시했다(사상계 53/08). 초기의 <사상계>는 학술지 성격이 강했지만 그 배경에서는 실천적 관심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상계>는 1955년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담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장준하 혼자서 만들어오던 <사상계>가 편집위원체제를 갖추면서 나타난 변화이기도 했다. 그해 1월 김성환을 초대편집주간으로 하고, 8인의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편집기획 및 내용 검토를 맡겼다. 3월에는 장준하의 광복군 동지였던 김준엽도 대만에서 귀국 직후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준엽의 참여 이후에는 상임편집위원제를 도입하여, 정치·경제, 교양일반, 문학예술 분야를 세 명의 상임편집위원이 맡아 각각 기획과 편집을 책임지도록 했다. 초대편집위원회는 민족통일, 민주사상함양, 경제발전, 신문화창조,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의 양성이라는 편집방침을 세웠다(김삼웅 2009, 338-343). 또한 ‘사상계 헌장’을 제정하여 1955년 8월부터 매호 권두에 신기로 했다.

모든 자유의 적을 쳐부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또다시 역사를 말살하고 조상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후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무능과 태만과 비겁으로 말미암아 자손만대에 누(累)를 끼치는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이 역사적 사명을 깊이 통찰하고 지성일관(至誠一貫) 그 완수에 용약매진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 지중(至重)한 시기에 처하여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할 민족의栋梁(棟樑)은 타고기명(託孤寄命)의 청년이요, 학생이요, 새로운 세대임을 확신하는 까닭에 본지는 순정무구한 이 대열의 등불이 되고 지표가 됨을 지상의 과업으로 삼은 동시에 종(縱)으로 5000년의 역사를 밝혀 우리의 전통을 바로잡고 횡(橫)으로 만방의 지적소산(知的所産)을 매개하는 공기(公器)로서 자유·평등·변영의 민주사회건설에 미력을 바치고자 하는 바이다(김삼웅 2009, 346-347에서 재인용).

이렇게 <사상계>의 실천 지향은 점차 분명해졌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국제정치현실과도 밀접히 맞닿아있었다. 민주주의는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진로”였다. 민주주의가 “8·15 해방을 전기로 하여”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계기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택하였다.” <사상계>는 이러한 선택이 “단순한 수입품이나 유행어 또는 비현실적 모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우리 민족이 국제정치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아직도 국토의 반분을 강점하고 있는 공산제국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적 권리요, 적어도 현존하는 정치체제 중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최대한 신장시킬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로의 길은 “가깝고 안이한 길”이 아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사상계 61/08).

지식인 집단으로서의 “사상계 그룹”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김건우 2015). <사상계>는 대표적 지식인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했고, 우수한 편집직원을 영입했다. 독자의 관심도 점차 높아졌다. 대학생과 청년층이 주된 독자층이었다. 발행부수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3천부씩을 찍었는데, 1955년부터 점차 늘어 12월호는 1만부를 발행하자마자 이삼일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울 정도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잡지로서의 위상이 굳어져갔다(김삼웅 2009, 345, 348, 371).



### III. 4·19의 감격과 실망

“자유·평등·번영의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지향은 1950년대 말 이승만 독재의 심화에 비례해서 <사상계>에 점차 두드러지게 반영되기 시작했다. 1958년 8월호에 게재된 함석헌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은 필화사건을 야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함석헌은 구속되었고 발행인인 장준하도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여론의 압력에 함석헌은 20일 만에 석방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사상계>는 이승만 독재에 반대하는 정치색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1958년 12월 보안법파동이 발생했다. 국회의사당에서 농성 중인 야당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뒤 자유당 의원만으로 보안법개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장준하는 1959년 1월호 권두언에 “민권의 확립은 구국의 원칙이요, 재건의 목표요, 치국의 방향이요, 우리의 공통된 염원이기에 이 해를 민권확립의 해로 맞아 이 해를 빛내고 보람 있는 해로 보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라고 썼다(장준하 1959a). 또 2월호에는 “무엇을 말하랴: 민권을 짓밟는 횡포를 보고”라는 제목만 있는 백지 권두언을 냄으로써 항의했다(장준하 1959b).

<사상계>는 3·15 부정선거를 목도하며 더욱 자유당 독재에 절망했다. 장준하는 1960년 4월호 권두언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이번 3·15 정부통령 선거전에서 너무도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름일망정 민주국가인데 그 집권당의 횡포가 이처럼 혹독할 수 있으랴. 공명과 영달에 현혹되어 거의 광적으로 날뛰는 그들은 일당독재의 실을 확연히 노출시켰고 일부 악질지도층은 악랄한 공산당의 수법으로 백성의 수족을 퐁퐁 묶어버리려 들고 있었다(장준하 1960a).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회의 정기를 일으킴에 동지를 규합하고 민주생활의 터전을 굳건히 하여 국토통일의 기틀을 이룩함에 그 방안을 찾고 만민균점의 복지건설을 위한 계책을 수립함에 전국의 지성을 모아야 한다는 뚜렷한 사실 앞에 우리는 엄연히 서서 오직 민도 향상에만 그 기대를 걸고 묵묵히 달마다 한권씩의 잡지나마 이 사회에 내어 놓았던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을 계속 “민도 향상”에서

찾겠다고 했다(장준하 1960a).

그러나 4·19 혁명이라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방 도시에서의 중고교생들의 부정선거 항의시위가 서울로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이 대거 항의 시위에 나섰고 대학교수들의 지지 시위도 이어졌다.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성명이 발표되면서 이승만 독재가 종언을 고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의 절망은 환희로 바뀌었다. 4·19는 곧 민주혁명으로 인식되었다(장준하 1960b).

흥미로운 것은 4·19로써 비로소 한국이 민주국가의 자격을 획득했다는 생각이다(이상록 2010b).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에 대한 이해에 근거했다. <사상계> 지식인들은 한국의 민본주의 전통을 근대적 민주주의와 구별하고(고병익 1963, 30), 민주주의는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비로소 한국에 이식되었다고 이해했다. 이는 서방 특히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의미했다.

그러나 수입된 자유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사상계>의 지식인들은 이승만 독재에서 찾았다.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유지와 이권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영국의 한 신문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림 같다”고 했던 지적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의 뇌리에 불길한 예언처럼 남아있었다. 수입된 민주주의가 한국 땅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며, 또한 자유와 민주를 문명의 표준으로 삼는 세계에 한국이 영원히 제대로 서기 힘들 것이라는 조롱이기도 했다. 하지만 4·19라는 시민혁명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입증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장준하는 “지금 우리는 입으로 ‘자유’를 논할 자격을 얻었으며 행동으로 민권을 과시한 실적을 남겼습니다”라며 감격했다(장준하 1960b). 민주주의라는 꽃이 한국에서 개화할 수 없다는 외국 언론의 조롱에 크게 자존심이 상했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4·19는 희망을 넘어 치유가 되었다. 이와 같은 감격은 다음 글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자유니 민주주의니 시민사회니 시민적 인간이니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 서투른 수입개념이었다. 8·15의 해방으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단번에 배급받았다. 그것은 우리의 피의 투쟁의 산물도 아니요, 혁명으로 전취한 권리도 아니었다.



그러기에 자유니 민주주의니 시민사회니 시민적인간이니 하는 개념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었다. 우리 속에서 우리나라의 진리가 아니고 우리 밖에서 주어졌던 관념이었다. 생생한 현실이 아니고 소원한 이념이었다. 근대서구사회가 봉건사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깊이 자각한 근대적 시민계급이 역사의 긴 세월을 두고 전제 군주 및 봉건세력과 피의 치열한 혁명투쟁을 오랫동안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는 무수한 근대적시민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전취한 권리의 체계요, 가치의 유산이다. 피로써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귀중하기 한량없다. 어느 독재자나 국가 권력이 이 권리의 체계를 깨뜨리거나 빼앗으려고 할 때 근대적시민은 피로써 이것을 지켰고 또 지킬 줄을 알았다. [중략]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민적 인간의 주체적체함이 없었다. [중략]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4·19혁명에서 비로소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았고 시민사회와 시민적 인간을 몸소 체험했다. 4·19의 피의 혁명과 더불어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자유를 논할 자격이 생겼고 민주주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안병욱 1960, 100-101).

또 다른 흥미로운 점으로서, <사상계>의 여러 필자들은 4·19를 유럽사에서의 부르주아시민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원하여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를 애써 민중혁명과 구별했다. 4월 혁명이 “민중의 승리”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상계> 지식인들은 4월 혁명이 결코 민중혁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집권자는 언제나 피치자와의 ‘동일화의 신화’ 속에 그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두어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지속할 수가 있다”는 지적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하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구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하나의 신화라고 적시함으로써 동의가 구성될 수 있는 것임을 나타냈다(사상계 60/06). 이는 <사상계>가 사회의 지도층과 피지도층 또는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간극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장준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월혁명은 자유와 민권의 선각자인 이 땅의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이다. 그 기반을 닦아온 것은 정객들 보다는 양심있는 이 나라의 교수들과 교사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요 이에 박차를 가해준 것은 신문이나 잡지들을 포함한 매스컴의 힘이고, 그 불길이 되어 탄 것은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정의감이 가장 두터운 학도들이었음 이 분명하다(장준하 1960c).

장준하는 “또다시 민중의 편에 서노라”고 선언했으나, 이는 민중을 민주주의 완성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지식인들이 민중을 이끄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계>는 4월 혁명을 일종의 지식인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민도향상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함을 주장했다(장준하 1960c). 신상초는 심지어 “약인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의감이 민중에게 강하지 않다”고까지 언급하며 “의식수준이 낮은 일부 서민층”이 이승만과 그의 추종세력에 대해 오히려 “동정을 느끼고” 이로써 “이승만 폭정이 20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사회심리적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했다(신상초 1960, 86).

4·19의 감격은 오래지 않아 실망으로 바뀌었다. 민주당 친구파의 대립, 계속되는 학생데모,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혼란상이 나타났다. 북한의 대남선전도 가중되었다. 이런 상황은 4월 혁명 이후 과도기에 처한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데모만능사상” 그리고 자유의 확대에 비례해서 책임의식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사회 혼란과 무질서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인식되었다.

사월혁명은 단순히 여야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을 따름 [중략] 혁명이란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불철저한 것이었다. [중략] 우리 국민 가운데는 배반당했다는 생각을 가진 이 적지않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월혁명이 배반당한 소이는 사월혁명이 무계획적인 것이어서 혁명의 논리를 관철하기 어려웠다는 객관적 사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려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대중의 지성수준이 낮은 탓이기도 하다.

학원마다 분규요, 또 거기에는 폭력사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우리의 교사와 학생은 모두 지성을 잃었던 말인가? [중략]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데 반드시 폭력적 불법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서 배운 버릇인가? 기업체마다 소동이요 노조가 자본가나 경영자를 쫓고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수이니 우리의 생산 활동은 모두 마비되고 중단돼도 좋다는 뜻인가? 왜곡됐던 노·자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정당한 일이지만, 거기에도 서루들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할 줄 아는 루울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월혁명후 데모의 과잉, 남발은 우리 사회의 일종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중략] 자기만은 절대 옳다는 유아독존의 사상과 개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할 줄 모르는 반민주주의적 사상이 하극상과 모략중상의 귀태를 빚어낸 것 [중략] 대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자유의 폭이 넓어지면 책임의 폭도 그만큼 넓어져야만 우리는 민주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상계 60/07).

혁명 후에 나타난 그 수많은 자칭혁명의 주인공들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계속하여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고귀하게 뿌려진 피의 훈향을 맡으며 자라리라고 믿었던 자유는 이제 방종으로 전락하고 폭력을 제거하고 사회의 안녕질서와 그 복지를 찾고자 행사되었던 민권은 자신을 또한 폭력으로 타락시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이 같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하나의 독재를 유지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민족사상 최대의 영예로 만방에 자랑한 자유와 민권을 위한 사월의 투쟁은 그 빛을 잃게 될 것이요, 또다시 만방의 조소거리가 될 것이다(장준하 1960d).

이렇듯 이승만 정권 붕괴에도 불구하고 <사상계>의 눈에 민주주의의 작동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웠다. 물론 불만족이 서구 자유주의 사상의 전개에서처럼 대중권력 즉 민주주의에 대한 공포의 정도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는지 모른다(Arblaster 2007, 509-545). 하지만 <사상계>는 독재가 사라진 공간에서 이제 “혼란에의 개탄과 절망은 바로 보이지 않는 독재로 군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사상계 60/08). 그 저변의 이유로는 아직 대중의 지성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지목되었다. 따라서 민도의 향상과 성숙을 위한 계몽은 여전히 시급한 필요였다(이상록 2010b, 115).

한국의 엘리트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사상계> 지식인들은 이승만 독재가 물러난 후에야 비로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고 양자의 조화를 꾀해야 하는 사상적 임무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임무가 명확히 개념적으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자유와 민주는 분명히 구분되기 보다는 동의어에 가까웠다. 그러나 어렵פות하게나마 “지성수준이 낮은” 대중의 분출하는 욕구가 다수의 폭정으로 귀결될지 모른다는 위험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사상계>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대중을 계몽하고 더 나아가 규율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사상계 61/03).

<사상계> 지식인들은 전통에서 근대로의 과도기적 이행에서 한국 민주주의 미성숙의 이유를 찾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있어야 하는데, ‘후진사회’로서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빈곤했고, 민(民)의 정치의식, 즉 ‘민도(民度)’도 높지 않았다. 게다가 지연과 혈연 등 전통사회의 연줄구조가 근대화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강하게 작동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근대화 및 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이해했던 것이다.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한편으로는 한국 지식인의 “열등의식”을 반영하지만(김상협 1960, 124), 다른 한편으로는 후진성의 탈피 즉 근대화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표출됐다. 4·19 직후 장준하가 “민생의 향상 없이 민도의 향상을 바랄 수 없고, 민도의 향상이 없이 민주국가의 실을 거둘 수 없”다고 적었을 때, 그의 주문은 복합적인 것이었다(장준하 1960c). 그것은 한편으로는, 앞서서도 지적했듯, 민도향상과 국민기강확립을 위한 지식인의 계몽역할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 〈사상계〉는 4·19 이후 새로 출범한 민주정부가 구악을 청산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면서 동시에 경제부흥에 진력할 것도 주문했다. “경제적 부흥만이 정치적 자립을 꾀할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생명같은 ‘자유’를 수호함도 이에 따른다”고 한 것이다(사상계 61/01). 즉 4·19 혁명으로 정치적 자유를 되찾았지만 정치적 자유를 보다 굳건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자유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IV. 5·16과 민족적 민주주의

〈사상계〉 지식인들이 제2공화국의 혼란상에 실망하던 가운데 5·16이 발생했다. 5·16 직후 출간된 권두언의 제목은 “5·16 군사혁명과 민족의 진로”이었다. 이 제목이 나타내듯 5·16은 ‘혁명’으로 인식되었다.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라는 것이다.

5·16 혁명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 [중략] 무능하고 고식적인 집권당과 정부가 수행하지 못한 4·19혁명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세력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5·16 군사혁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5·16 혁명은 4·19 혁명의 부정이 아니라 그의 계승,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상계〉는 군사정부가 “시급히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최단 시일 내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쾌히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공약을 깨끗이, 군인답게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군의 위대한 공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며, 민주정치의 확고한

전통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사상계>가 5·16을 4·19의 연장으로, 또 근대화와 민주화의 과업에 대한 방해요인으로서가 아니라 과업 완수를 위해 불행하지만 필요한 과정으로 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사상계 61/06).

5·16에 대한 <사상계>의 호의적 평가를 두고 혹자는 “이것이 과연 <사상계>의 권두언일까 싶을 정도”라거나, <사상계>가 “<사상계 정신>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고 평한다(김삼웅 2009, 423-425). 그러나 이러한 논평은 <사상계>가 후진성 탈피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녔고, 이런 공통점 때문에 5·16 세력이 표방한 사회기강 확립과 반공, 그리고 근대화 추진에 공명할 수 있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제2공화국의 혼란상에 대한 <사상계>의 깊은 실망과 위기의식으로부터 5·16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도출되었음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다.

5·16 직전에 장준하는 “만일 현 국회와 정부가 이 이상 더 우유부단과 무능, 무계획을 일삼으면서 그 정치적 책임의 수행을 망각한다면, 본지는 새롭고도 험찬 민족적 자활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가차 없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또한 첨부해두는 바이다”라고 경고할 정도였다(장준하 1961). 그리고 불과 두 달 뒤에 <사상계>는 “법질서의 존중, 강건한 생활기풍의 확립, 불량도당의 소탕, 부정축재자의 처리, 농어촌의 고리채정리, 국토건설사업 등에서 괄목할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며 군사정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 이유는 바로 <사상계>가 민주당 정부에 경고하고 요청해왔던 바를 군사정부가 실천에 옮기려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군사정부에 대한 <사상계>의 긍정적 평가는 당분간 유지되었으나 차츰 유보적 태도로 바뀌어갔다. 민정이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1963년 민정복귀를 선언한 이후 군사정부는 수차례 이를 확인했다. 이에 <사상계>는 “더욱 두터운 신뢰”와 “새로운 광명을 보는 희열”을 표현하기도 했다(사상계 62/08). 그러나 <사상계> 필자들은 의구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후진국의 군사혁명에 대해 신일철(1961, 274)은 그것이 “진정한 국민혁명으로 발전하여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경제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으나 “미리타리즘, 미리타리 덕테이터십의 위험성도 내포”한다고 했다. 신상초(1962, 44)는 “5·16 후의 군사정권이 낡은 고목을 빼버린 것만은 확실하나 민주주의의 새 나무가 뿌리박고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갖추어 놓고 있는가는 적어도 민정 이양 후가 아니 고서는 현재로서 경솔히 평가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사상계>는 민정이양이 단순한 “민간정부의 복귀”에 그치지 않고 “민주정부로의

복귀"가 되어야하며, 군사정부가 그 준비를 맡아주기를 바랐다. “공명정대한 총선거”를 준비하고, 이를 위한 기초로서 “건전한 민주주의 정당”을 육성하며, “차후의 민족적 지도세력의 육성”을 희망했다(사상계 62/01). 특히 지도세력 육성과 관련해서 양호민은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강렬한 추진력을 가진 지도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발적인 기울에 복종하는” 민주주의 엘리트들이 “설득을 통하여 대중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그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양호민 1961).

지식인이 대중을 계몽해야한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지만, 4·19 직후의 혼란을 마주하며 나타났던 통제되지 않는 대중에 대한 고민은 사라졌다. 즉 엘리트와 대중 사이의 긴장관계는 더 이상 심각한 고민거리로 남아있지 않았다. 자유주의적 엘리트는 대중을 일방적으로 계몽하고 설득하면서 이끌어 나가면 될 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군사정부에 의해 대중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진 데 있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5·16 이후 <사상계>의 관심의 초점이 대중 보다는 군사정부에 우선적으로 맞춰지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군사정부가 과연 민정이양을 약속대로 실행에 옮길 것인지부터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1962년 말부터 민정이양 문제가 정치현안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하면서 군정에 대한 <사상계>의 평가도 기로에 서게 된다. 군사정부 안에서는 민정이양 희망 세력과 정치참여 주장 세력 간에 극심한 다툼이 벌어졌다. 박정희는 번의 끝에 결국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다. 이 과정에서 <사상계>는 “군인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히려 “증권파동, 워커·힐, ‘새나라자동차’ 사건, 민주공화당 사전비밀조직” 등 군사정부의 각종 부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독재경향이나 강권지배, 의욕과잉이 반민주적 경향으로 흐르는” 것만 확인했다. 또한 각종 정책 실패로 경제는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렇게 ‘군사혁명’이 4·19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순진한 기대는 사라져갔다. 대신 “강권정치도 결국 발전의 비약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치명적인 맹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재인식되었다(사상계 63/06: 63/07; 양호민 1963, 53-54).

1963년 9월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소위 ‘사상논쟁’이 벌어졌다.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보선은 1963년 9월 18일 신문지상에 출마의 변을 밝히며 이번 선거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민주정치를 소생시키려는 생각과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쓴 비민주주의적인 생각과의 결전”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군사정부 2년간의 암흑과 공포와 비밀주의와 국민분열정책”을 비판하고 “이와 같은 비민주주의적인 상



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민주주의를 재확인하고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통한 국민의 정부를 세워 민주정치를 다시 궤도상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보선 1963).

공화당 대통령후보 박정희는 ‘민족적 민주주의’로 대응했다. 그는 9월 23일 라디오 정견발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는 건전한 민족주의의 바탕 위에서 존재해야한다”며 “이번 선거는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자유민주주의사상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의 대결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사고방식은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자주 자립의 민족적 이념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박한 자유민주주의인 것이다”라고도 했다(경향신문 63/09/23: 63/09/28).

박정희가 제기한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 윤보선은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누가 민족주의자며 누가 비민족주의자란 말인가. 누가 민주주의 신봉자며 누가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물으며 “박의장의 민주주의 신봉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의 과거 남로당 경력 의혹을 제기했다(동아일보 63/09/24).

윤보선이 시비를 건 ‘사상논쟁’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는 비교적 큰 여론의 호응을 얻었다. 사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결부시키는 경향은 이미 존재했다. 또한 지식인 사이에 “구미식 자유민주주의가 그 지도이념이 될 수 없다”는 인식도 퍼져있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나세르의 군사쿠데타가 성공한 혁명으로 승화되었다는 인식,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나 파키스탄 아유브 칸의 ‘기본민주주의’처럼 후진지역의 실정에 맞는 형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권보드래·천정환 2012, 52-55; 이상록 2010a, 51-52).

비록 1963년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전면 부각되었지만 박정희가 민족적 민주주의의 생각을 품어온 것도 선거 이전부터였다. 박정희에게 이 생각을 불어넣어준 것은 박정희의 대구사범학교 동기로서 5·16 당시 부산일보 주필이었던 황영주로 알려져 있다(안경환 2013, 372, 422). 박정희의 생각의 골자는 분명했다. 서양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에게 이식되었으나 “우리의 풍토와 생기에 맞지 않[아] 허다한 부작용이 일어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르짖던 자유 민주주의는 한낱 장식”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식상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자주적인 정신과 자조의 노력, 자율적인 행동과 자립 경제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박정희 1993, 80, 285; 박정희 2005, 11-12, 32-34, 39).

박정희가 제기한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계> 필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첫째 부류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서구형의 민주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정통”이라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신상초 1962, 48-49).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이나 파키스탄 아우브칸의 ‘기본민주주의’처럼 후진사회의 지도자들이 종종 민주주의 앞에 민족을 붙이는 것은 집권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말살일 뿐이라고 했다. 또 “유달리 민족주의가 집권자에 의해서 강조될 때 그것은 독재정치의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며(김성식 1963, 56), “민주주의를 기피하는 민족지상주의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환상”이라고 단언했다(사상계 63/05, 27). 이들은 후진사회가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민주주의를 보류해야한다는 소위 “선의의 독재론”에 대응하여,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보류하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히 후진국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이항녕 1963).

두 번째 부류는 민족적 민주주의에 부분적으로나마 동조하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붕건적 수구세력”이 내세우는 추상적 원리로 전락했다고 생각했다. “현실 적응능력을 상실한 ‘자유민주주의’가 마침내는 알맹이 없는 ‘데마고그’로서 ‘보수반동’을 은폐하면서 우리 사회 현실과는 나날이 거리를 넓혀”간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박정희가 내세운 민족적 민주주의의 취지에 공감했다. 민주주의는 “역사사회적인 제약조건과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고 전승되어온 기성의 고정적인 가치개념이 아”니며, 한국의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민족주의의 “전진적인 요소를 왕성히 흡수·소화”해서 “붕건적 또는 식민지적 잔재의 청산”과 “경제적 독립” 그리고 “자위자주”를 성취해야한다고 보았다(임방현 1963).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외세에 의존하여 정치·경제를 농락하는 특권계급·매판세력을 물리치고 진정한 민족세력을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민족국가를 인도토록 하여 서민정치 서민경제를 이룩하겠다는” 박정희의 “민족주의사상은 진보적인 면”이 있었다(남재희 1963).

하지만 박정희와 군사정부가 과연 반대세력을 이기고 민족주의를 관철시킬 힘과 능력을 지녔지는 의문시되었다. 힘의 측면에서, 박정희와 공화당은 대통령 당선과 총선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에 있어, 정치세력에 있어 야당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박정희는 “농민 어민 소도시 인텔리를 기저세력으로” 삼아 “시대적 신세

력층”을 형성하겠다고 했지만, 미국과 “전통적 보수세력, 중간계급, 기업가” 그리고 “몇몇 퇴역장성”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있었다(남재희 1963, 54-55). 능력의 측면에서도 “혁명군인들”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최석채 1963). 민족적 민주주의의 구호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예를 들면 “토론과 계몽을 거치지 않고서 어떻게 민족세력을 형성”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남재희에 따르면, 이러한 결여로 인해 박정희와 공화당은 “‘민족적민주주의’ 또는 ‘한국적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들 정치철학의 기본으로” 삼겠다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혼란을 자초했고, 따라서 그들의 “민족주의에서는 어설피 말을 꺼내다가 그친 모자람”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사상계> 필자들은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를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박정희의 “모색”은 의도는 좋으나 “그 본질이 뚜렷이 드러날 문제에 부닥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유보하기도 했다. “민족적민주주의, 한국적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아직 그에 따른 정치적 시련을 거치지 않았기에 그 내용 또는 관(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남재희 1963). 그러나 민족적 민주주의는 제3공화국 출범 이후 한일회담 추진이 적극화되면서 본격적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 V. 실망에서 반대로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박정희를 비롯한 혁명주체세력의 대부분은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정치권력으로 남았다. 이러한 과정이 선거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민정이양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상계> 지식인들은 박정희와 군사정부에 대한 신뢰를 점차 거두어들었고, 이는 이후의 대정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보다 직접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한일회담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회담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민족적 민주주의 구상에 입각하면 한일관계정상화는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를 위해 필요했고, 근대화는 민족의 자립을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였다(황용주 1964a: 1964b). 그러나 이미 제3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사상계>는 다음과 같이 썼다.

박 정권이 말하는 민족자주는 이제 역사적 검증을 받을 때가 왔다. 즉 그것이 내세운 ‘민족주의’의 진위가 판가름될 날이 온 것이다. 지금까지의 굴종적인 대일 저자세를 과감하게 청산해 버리고, 민족의 편에 서느냐 않느냐에 박 정권의 살고 죽는 길은 결정되는 것이다(사상계 63/12).

한일회담은 한국민족주의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자극했고, <사상계>는 이에 대한 박정희정부의 태도를 그의 민족주의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았던 것이다.

1964년 3월 김종필 공화당의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오히라 외무상을 만난 후 회담을 5월 이내에 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일회담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국내의 어떤 정치세력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배의 기억이 생생하던 당시 일본은 민감한 주제였다. <사상계>는 박정희 정부가 “급박해진 경제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일관계의 조기타결을 서두르”면서 일본에 대해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사상계 64/03: 64/04). 군정 3년간의 부패·부정·무능, 그리고 민주주의 몰수의 결과가 대일굴욕외교로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사상계 64/05).

이제 <사상계>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성격규정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르면 박정희가 내세웠던 민족적 민주주의는 “친일 사대주의”를 감춘 “가식”에 불과했다(사상계 64/04). 또한 박정희는 군대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반의정치—‘거짓말’—의 선배”로 못 믿을 존재였다. 더 나아가 “5·16 쿠데타는 4·19 민주혁명과는 인연이 없으며 정변 초기의 당사자들의 주관적 의도 여하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5·16은 4·19의 영광을 부정 내지는 말소해 버렸던 것”이었다(사상계 64/04 긴급증간호). 이렇게 박정희정부의 본질을 반민족과 반민주로 인식하게 된 이상, <사상계>와 박정희정부의 정면대결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갔다.

1964년 6월 3일,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정권퇴진 요구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서울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한일회담의 타결도 연기되었다. 그러나 12월부터 회담이 재개되어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체결 및 비준과정에서 정부와 반대세력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루어졌다. 실로 1965년의 “모든 국내정치는 한·일회담문제로 직결”되어 있었다(이방석 1965, 36).

<사상계>의 한일회담 및 한일협정 반대는 계속되었다. 장준하는 회담 이면에 “우

리나라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합법화해 보려는 무서운 책략이 숨어”있으며, “만일 한·일관계가 현재대로 타결되는 날에는 멀지 않아 이 나라는 일본매판자본의 종복으로 전락할 것이요, 따라서 구민주국을 방불케하는 일본의 괴뢰정부가 이 민족에 군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단언했다(장준하 1965a, 1965b). 이렇듯 일본에 대한 거부감과 일본 지배의 귀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컸다.

아울러 한일협정을 막후에서 추진한 미국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었다. <사상계>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한국국민의 극도로 편협한 대일감정의 결과로 해석하고 많은 지식인과 언론인들의 비정상적 정상화에 대한 무수한 비판과, 국민들의 물끓는듯한 국론을, 소란을 취미로 하는 한국인의 습성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무시해왔다”며 분개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근자에 이르러 미국의 정책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편집동인일동 1965), 더 나아가 “미국이 과연 얼마만큼 서구식 민주주의가 한국에 토착화하여 개화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게”한다고도 썼다(사상계 65/10). 이러한 문제제기는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라는 <사상계>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1965년 들어 박정희 정부는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강제력을 동원하여 진압하기 시작했다. 언론과 학원에 대한 사찰과 통제도 강화했다. 이에 <사상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 비판을 강화해갔다. 신상초(1965a)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이다. 그러나 현대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동의에 의한 지배이다. 소수의 치자 즉 지배자가 피치자 즉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의는 자동적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와 의견을 지닌 집단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얻어진다. 따라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언론과 의사표시가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공정한 선거에 의한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상계>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표준적 이해에 근거하여 박정희 정권을 신랄히 비판했다.

평화적 시위는 헌법에 엄연히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 [중략] 정부는 걸핏하면 ‘불법집회’니 ‘불법데모’니 하고 있지만 문노니 누가 그러한 집회와 데모를 불법으로 만들었는가? [중략] 폭동도 아니요 난동도 아닌 균등의 행진을 이러한 야만적 수법으로 탄압하는 사례를 우리는 적어도 민주주의의 간판을 걸어놓고 정치하는 나라에서는 일찍이 본 일이 없다(장준하 1965b).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표리부동한 언행을 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민주적인 토론과정도 결재과정도 성립되기 어렵다. 대체 민주주의란 공동체의 성원이 아무런 위협도 공포도 느끼지 아니하고 토론과 설득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인데, 한쪽이 무기를 잡고 위협을 하는데 반대쪽이 무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운위한다는 것부터가 어리석다(신상초 1965b).

아울러 “경찰과 군대의 그늘이 양성하고 있는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자유가 억압된다는 비판도 강하게 표현되었다.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박정권의 빨가숭이의 군사력을 발동하여 소란스러운 사태를 진압”했으며, 이는 “박정권의 궁극에 있어서의 실력적 기초가 바로 군사력에 있음을 아낌없이 폭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군의 정치적 압력 작용을 원활하게 그러나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한국의 민주정치를 본래도에 올려놓기 위한 최대의 과업”으로 인식되었다(신상초 1965b, 94). 폭력을 독점한 군사독재에 대한 반대가 민주주의 회복의 관건으로 등장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사상계>의 부정적 인식은 눈덩이처럼 커갔고, 급기야 도덕적 평가까지 부가되었다. “악한 세력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속에서 성장하는 선한 세력이 굳어지고 커지는 법이다”는 언급에서 드러나듯 박정희 정부는 “악”으로, 비판세력은 “선”으로 보는 이분법이 성립했다(사상계 65/09). 물론 선과 악의 타협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이는 향후 펼쳐진 박정희 시대 한국정치의 전개방향을 예고했다.

## VI.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사상계> 지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상계> 지식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기꺼이 받아들인 이유는 비단 그것이 한국이 생존을 의존하던 미국을 통해 이식된 이념이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상계>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문명의 표준을 바로 민주주의에서 찾았으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국내에 소개하여 민(民)을 계몽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사상계>는 민주주의적 발전을 통해서만 우리 민족이 “국제정치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그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새로운 진로이자 중요한 정체성의 요소가 되어야 했고, 또한 이를 통해서만 민족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사상계>가 4·19에 감격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길을 옹호으로써 한국은 드디어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문명세계의 일원으로 입지를 확보했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두 개념인 자유와 민주의 관계에 대한 <사상계>의 인식은 그리 예리하지 못해서 종종 둘을 혼용했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에서 두 개념은 대립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성이 강하지만 서양의 역사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대중 권력 즉 민주주의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을 지녔던 것은 사실이다. <사상계> 지식인들도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4·19 이후의 사회적 혼란상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민도 향상’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지만, 짧은 시간동안 대중의 요구가 여과 없이 분출되는 무질서를 우려하며 사회적 규율을 희구했다. <사상계>가 5·16 직후 이를 민족주의 혁명으로 부르며 긍정했던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일단 5·16으로 군사정부의 통제가 강화된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두려움은 더 이상 표출될 필요가 없었다. 권위주의에 대항하며 자유와 민주는 다시 동의어처럼 되었던 것이다.

셋째, 민족은 <사상계>가 박정희와 친화했으나 끝내 불화하게 된 지점이었다. <사상계>는 5·16으로 민주주의 절차가 파괴된 것을 애석해하고 민주정치로의 조속한 복귀를 주장했지만, 그러면서도 군사정부의 민족주의적 열정과 근대화를 위한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근대화는 <사상계>가 민주주의와 함께 열망하던 목표였던 것이다. 1963년 대통령선거전에서 박정희가 민족적 민주주의를 제기했을 때 <사상계>의 반응이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부류는 민족적 민주주의가 일종의 이단이며 독재를 은폐하는 위해성을 지녔음을 강조했다. 반면, 다른 부류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봉건적 수구세력”의 이념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민족적 민주주의의 전진적 성격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박정희가 과연 민족적 민주주의를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의문시했다. 그리고 결국 한일회담이 적극 추진되면서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가식에 불과했던 것으로 정리되고 말았다.

넷째, <사상계>가 민주주의는 물론 민족주의의 측면에서도 박정희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접게 되면서 정권에 대한 비판은 도덕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선악에 대항하듯 독재에 맞서는 것이 곧 민주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강화되었고, 그 결

과 권위주의적 통제와 이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이 이후 한국정치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타협과 조정을 통해 발휘되는 본래의 유연성을 상실한 채 투쟁의 이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1960-70년대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두 종류의 비판적 입장이 존재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외래 이념이어서 한국의 사정에 맞지 않는다며 “토착적 이데올로기”로 대체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떤 추상적 기준을 자유민주주의의 본질로 이상화하고 그것에 따라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불충분성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첫 번째 비판은 자유민주주의가 이미 한국정치의 한 구성부분으로 내재화되었음을 부정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국제정치적 계기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정치의 현실을 지나치게 “명목적 이상론적으로 평가”하는 한계를 나타냈다(노재봉 1985, 335-338). <사상계>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는 물론 당시 한국 지식집단이 지녔던 상상력의 한계이기도 했다.

1960년대 전반기로부터 이미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오늘날 한국 정치 및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다. 국내 정치적으로, 예컨대 각종 사적 의견과 이익이 토론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공적 절차와 관행을 정립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심화시켜야 하며, 국제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국익과 정체성을 지키고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 심화, 국제적 생존 및 분단극복의 목표 차원에서 <사상계>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오늘날 한국의 지식집단은 <사상계>를 강박했던 후진성 의식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안도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른다.

투고일: 2016년 5월 5일

심사일: 2016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일

## 참고문헌

-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서울: 아카넷.
- 경향신문. 1963. “진정한 자유민주는 민족주의토대로.”(9월 23일).
- \_\_\_\_\_. 1963. “왜 폭로작전을 쓰나.”(9월 28일).
- 고병익. 1963. “민주주의와 역사의식.” 『사상계』(5월).
- 권보드래·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서울: 천년의 상상.
- 김진우. 2015. “근대화 모델 제시한 사상계 그룹,” 『주간동아』 1005호(9월 14일).
- 김삼웅. 2009. 『장준하 평전』. 서울: 시대의창.
- 김상협. 1960. “한국의 신보수주의.” 『사상계』(6월).
- 김성식. 1963.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사상계』(11월).
- 김정인. 2016. “민주주의, 해방기 분열 혹은 통합의 아이콘.” 이경구 외, 『한국의 근현대, 개념으로 읽다』. 서울: 푸른역사.
- 남재희. 1963. “박정권의 공약과 ‘미지수’ 민주주의.” 『사상계』(11월).
- 노재봉. 1985.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 한국의 경우.” 『사상과 실천: 현실정치인식의 기초』. 서울: 녹두.
- 노종호. 1995. “나에게 《사상계》가 의미하는 것.”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민족혼·민주혼·자유혼: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서울: 나남.
- 동아일보. 1963. “박의장의 ‘민주’ 신봉의심: 윤보선씨, 호남유세서 주목할 발언.”(9월 24일).
- 류상영. 2002.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미관계: 중층적 메카니즘.”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 박상섭. 2012. 『국가, 전쟁, 한국』. 고양: 인간사랑.
- 박정희. 1993.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지구촌.
- \_\_\_\_\_. 2005. 『한국 국민에게 고함』. 서울: 동서문화사.
- 사상계. 1953. “편집후기”(4월).
- \_\_\_\_\_. 1953. “편집후기”(5월).
- \_\_\_\_\_. 1953. “편집후기”(6월).
- \_\_\_\_\_. 1953. “편집후기”(8월).
- \_\_\_\_\_. 1953. “편집후기”(11월).

- \_\_\_\_\_. 1960. “민중의 승리.”(6월).
- \_\_\_\_\_. 1960. “4·26 이후의 사회상을 보고.”(7월).
- \_\_\_\_\_. 1960. “7·29 총선거를 바라보며.”(8월).
- \_\_\_\_\_. 1961. “1961년을 맞으면서.”(1월).
- \_\_\_\_\_. 1961. “3·1 정신은 어떻게 계승되어야 할 것인가?”(3월).
- \_\_\_\_\_. 1961. “5·16혁명과 민족의 진로.”(6월).
- \_\_\_\_\_. 1961. “8·15 해방과 우리 민족의 과제.”(8월).
- \_\_\_\_\_. 1962. “1962년의 과제.”(1월).
- \_\_\_\_\_. 1962. “민정복귀를 일년 앞두고 - 다시 8·15를 맞으며.”(8월).
- \_\_\_\_\_. 1963. “의회민주주의를 모략하지 말라: 대일의존경향을 경계한다.”(5월).
- \_\_\_\_\_. 1963. “역사는 이 시기를 어떻게 심판할까? 민정은 ‘시혜’받는 것이 아니다.”(6월).
- \_\_\_\_\_. 1963. “파탄 직전에 서서.”(7월).
- \_\_\_\_\_. 1963. “대일 저자세와 민족자주.”(12월).
- \_\_\_\_\_. 1964. “3·1정신과 한·일문제의 해결.”(3월).
- \_\_\_\_\_. 1964. “아아! 4·19의 영광은 어디로?”(4월 긴급증간호).
- \_\_\_\_\_. 1964. “우상을 박멸하라! 굴욕외교에 항의한다.”(4월).
- \_\_\_\_\_. 1964. “유산된 혁명 3년: 신관세도정치부터 자기개혁하라.”(5월).
- \_\_\_\_\_. 1965. “국난에 부딪혀서.”(9월).
- \_\_\_\_\_. 1965.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은 무엇인가.”(10월).
- 신상초. 1960. “이승만폭정의 종언: 4·26은 혁명의 종말이 아니라 시발점이다.” 『사상계』(6월).
- \_\_\_\_\_. 1962. “민주주의는 사치품인가? 한국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고찰.” 『사상계』(5월).
- \_\_\_\_\_. 1965a. “민주주의는 신화가 아니다: 데모크라시의 올바른 의미.” 『사상계』(8월).
- \_\_\_\_\_. 1965b. “선량한 관리자: ‘민주적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사상계』(11월).
- 신일철. 1961. “소리없는 혁명.” 『사상계』(11월).
- 안경환. 2013.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 서울: 까치.
- 안병욱. 1960. “이(利)의 세대와 의(義)의 세대.” 『사상계』(6월).
- 양호민. 1961. “민주주의와 지도세력.” 『사상계』(11월).
- \_\_\_\_\_. 1963. “다시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사상계』(3월).
- 윤보선. 1963. “민주주의적인 사상과 비민주적 사상과의 대결(상).” 『동아일보』(9월 18일).
- 이방석. 1965. “퇴색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우여곡절과 파란중첩의 정치사.” 『사상계』(12월).

- 이상록. 2010a.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 담론.” 『역사와 현실』 제77호.  
 \_\_\_\_\_. 2010b. “4·19 민주항쟁 직후 한국 지식인들의 민주주의 인식: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사총』 제71호.
- 이향녕. 1963. “소수의 지배냐 다수의 지배냐?” 『사상계』(1월).
- 임방현. 1963. “‘자주’·‘사대’ 논쟁의 저변: 이른바 민족적 민주주의 사상의 주변.” 『사상계』(11월).
- 장준하. 1959a. “새해는 ‘민권의 해’로 맞고 싶다.” 『사상계』(1월).  
 \_\_\_\_\_. 1959b. “무엇을 말하랴: 민권을 짓밟는 횡포를 보고.” 『사상계』(2월).  
 \_\_\_\_\_. 1960a. “창간 7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사상계』(4월).  
 \_\_\_\_\_. 1960b. “민권전선의 용사들이여 편히 쉬시라.” 『사상계』(5월).  
 \_\_\_\_\_. 1960c. “또 다시 우리의 향방을 천명하면서.” 『사상계』(6월).  
 \_\_\_\_\_. 1960d. “1960년을 보내면서.” 『사상계』(12월).  
 \_\_\_\_\_. 1961. “창간 8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사상계』(4월).  
 \_\_\_\_\_. 1965a. “현행 한·일회담을 분쇄하자.” 『사상계』(5월).  
 \_\_\_\_\_. 1965b. “이 나라와 이 사회는 어디로?” 『사상계』(6월).
- 최석채. 1963. “군사혁명이 남긴 족적: 혁명군인 역시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사상계』(4월).
- 편집동인일동. 1965. “한·일협정조인을 폐기하라.” 『사상계』(7월).
- 황용주. 1964a. “한국지식인과 비판정신: 지성의 세계성과 정치권력의 국가성.” 『세대』(6월).  
 \_\_\_\_\_. 1964b. “형극에서 공동의 광장으로: 한국의 민족주의와 그 방향.” 『세대』(7월).
- Arblaster, Anthony 저. 조기제 역. 2007. 『서구 자유주의의 응성과 쇠퇴』. 서울: 나남.

ABSTRACT

---

## The Space for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Political Discussions in *Sasang-gye* during the Early 1960s

**Sang-Yoon Ma**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article examines South Korean intellectuals' discussions about liberal democracy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60s, focusing on an influential magazine, *Sasang-gye*. Despite the Cold War and the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the *Sasang-gye* intellectuals dreamed and strived to achieve liberal democracy. Recognizing its universality, they hope liberal democracy to be the new course for the nation and an essential part of the national identity. They also believed democracy was the only way for the nation's survival. The Korean intellectuals, however, often failed to distinguish the concepts of liberty and democracy which constitute liberal democracy, and used them interchangeably. The *Sasang-gye* democrats initially sympathized with Park Chung Hee's call for nationalism but began to turn against him when the Park government pushed fo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hip with Japan. Since then, *Sasang-gye*'s criticism of the government began to bear a moralistic tone.

**Keywords:** The 1960s, April 19 revolution, May 16 *coup d'état*, Chang Chun Ha, Korea-Japan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liberal democracy, nationalistic democracy, Park Chung Hee, *Sasang-gye*